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

서론

1.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0월 25일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받았다. 당시 총65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UPR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권고는 총70개로 정리되었다. 심의 이후 UPR결과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인 2013년 1월, 우리나라는 70개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를 정리하여 UN에 제출하였다.
2. 정부의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정부는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을 제출하기 전인 2012년 11월, 16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권고 이행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관련 정책에 대한 소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권고 수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행경과

3. 제1차 UPR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정부는 UPR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년)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 UPR 권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중복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2012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할 시에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UPR 권고 이후 변화된 과제는 많지 않다.
4. 2014년 1월,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 UPR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시민단체에 회신함과 동시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정부 의견서를 공개 게시하였다. 이후 2015년 3월에는 정부가 공개 게시한 의견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개 정부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10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UPR 권고이행상황과 이행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시민사회 협의 주요 내용

5.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의 UPR권고 이행과제에 대해서 연구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이행 상의 난점이나 주요 쟁점에 대해 알기 어려우며, 시민사회와 논의를 할 때 보다 공개적이고 책임성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UPR권고 이행상황이 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 연구용역, 토론회 같은 것에 국한되고 있어 아쉬우며 가시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시민사회는 미가입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성·인종·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정보인권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였다.
7. 또한 사회권 부문에서 공공병원의 비중 확대, 의료급여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 보장의 현실상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타 아동의 출생등록, 아동학대,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학생인권조례 등 아동권리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8. 아래 표에서는 개별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수용	계속된 검토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경우도 사형제 폐지와 연관되는 문제로서 사형제 폐지 여부에 따라 비준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국내법과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법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정부는 2014년 9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상의 권리에 관한 국내구제절차 관련 연구를 용역 발주하였고, 최종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관련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시에 필요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형사정책연구원의 ‘15년 과제로 채택하였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상의 국내예방기구(NPM)의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구금시설은 각 시설의 소관 상급기관 및 감독기관(국방부, 법무부, 검찰)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및 실태점검을 받고 있다. 인권위, 권익위 등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개되며, 여타 기관의 조사결과도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개되고 있다.
4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아동의 개인 청원권) 비준의 전제가 되는 국내구제절차와 법원의 관련 판결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국 정부는 현재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에 대해서는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관련 고충처리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상담제공 등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강제실종협약의 가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소관 부처에서 내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7	<p>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 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p>	<p>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p>	<p>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비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협약 해석에 관한 ILO와의 이견으로 인해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노동자협약’의 일부 조항은 현재 국내법과 충돌되고 있어 비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주 여성을 포함한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p>
8	<p>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p>	<p>수용</p>	<p>‘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2013년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수용	정부는 2013년 5월 헤이그협약 가입 서명을 하였고,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정책 정비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2015년까지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0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 「민법」 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아동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친생부모 입양동의 관련 금전 거래가 있거나 입양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입양특례법 제13조②,③, 제39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배치되는 민법 제781조를 개정하였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수용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대한 유보 철회의 전제가 되는 입양 관련 국내법이 정비되어, 입양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입양허가 청구 심판 전에 친부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보철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수용	2014년 3월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밝힌 바와 같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14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위원의 자격, 임명 과정,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에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고, 이 법률안은 현재 관계 부처 협의 중이다.
15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약회의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2013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평가단 구성 시에 시민사회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정책협약회의에서 UPR 권고를 반영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16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 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한국은 2008년 이미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고,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인권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 화하고 있다. 2012년 9월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고, 2013 년 9월에는 최종견해 권고 사항 중 △이주 노동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난민 분 야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우리 측 후속조 치 관련 정보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평가 를 위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2013.5월),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아시아 지역 협의(2013.9월) 등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동 문제 관련 우리의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소 개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정 례적으로 국내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17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수용	<p>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부터는 굿네이버스에 모니터링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권리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p> <p>아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08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을 2009년부터 시설종사자·부모 및 예비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p> <p>2012년부터 학대피해아동 전담 심리치료서비스 및 재학대 발생방지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수용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계획 수립 시 아동권리소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도입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하였다.
19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 (말레이시아);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 (오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정부는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2013년부터 개최하였으며, 아동분야에서 처음으로 중기계획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20’을 2015년 5월 채택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5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158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예산은 약 4.5조원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p>한국 정부는 2004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병역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모집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상향하였다.</p> <p>유사군사훈련 금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고교군사교육(교련)을 7차 교육과정 개편 시('97.12.30.)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이후 교과명을 '안전과 건강'으로 바꾸었다('11).</p>
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수용	<p>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향유하며, 차별금지에 관하여 90여개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13.4월) 신규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13.4월~'13.12월)</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2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수용	위 권고21에 대한 답변 참조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및 캠페인 차원에서 2012년 이래로 문화예술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이다.
23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수용	정부는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였고, 종교지도자, 차별관련 이해관계자 및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와 적용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차별금지 사유 등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24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위 권고 23에 대한 답변 참조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5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 (팔레스타인);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용	「성차별(성희롱) 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하였다(12.3~10월).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26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 (중국);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 (몰도바);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오만);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수용	위 권고 25에 대한 답변 참조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200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비)혼모/부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미(비)혼모/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등을 지원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7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 (폴란드)	수용	<p>아동학대 문제를 포함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13.6.28) 시행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각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단체로 확대하였다.</p> <p>TV,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가정폭력 인식개선을 홍보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해 긴급구조를 위한 신고 전화번호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였다.</p> <p>또한 검찰은 결혼이민자 보호, 통역인 지정 규정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였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8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브라질);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 (멕시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 (독일)	일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미(비)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7개 권역별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정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10개 대안학교를 운영 중이다. 학교 밖 미혼모의 학교교육 복귀를 위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학교에서 실제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29	<p>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p>	<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p>	<p>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정해진 기간(1개월)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였다.</p> <p>또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2013년 7월 「민법」에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입양 전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였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 (캐나다)	자국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 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30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바)	수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시행 중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는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1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 (스페인)	수용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상의 주요 권리와 권리침해시 구제절차 및 상담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문화이해, 올바른 노사관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2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 (수단);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p>미등록 이주여성 자녀가 학교교육을 받고 학력증빙이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p> <p>또한 이주여성에게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여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고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p> <p>2006년부터 시작해 현재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p>
3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수용	위 23번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참조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님	2013년 4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계간’을 ‘항문성교’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92조의6으로 이동하였다. 동 조항은 군내 성군기 확립을 위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5	<p>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위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슬로베니아);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 (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 (독일);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영국);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존중할 것 (벨기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 (온두라스);</p>	<p>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p>	<p>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없으며, 사형제 폐지 또는 집행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3년과 같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p>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슬로바키아);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 (터키);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 (스페인);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6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 (폴란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음	경찰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법규준수에 대해 교육하고, 상황별 유의사항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집회현장에서의 무력행사에 관해서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구체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한편 2014년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업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경비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37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수용	경찰은 전국 보안수사대 팀장, 대장, 지휘관 워크숍 과정에 인권보호과정을 배정하고 2012년 1회, 2013년 7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 보안수사대 15개 진술녹화실의 시스템 노후를 개선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8	<p>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 (우루과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헝가리)</p>	수용	<p>학생에 대한 학교 내 체벌은 이미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해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p> <p>정부는 2014년 2월 학생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부처,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 등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관한 교육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39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 (몰도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수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6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보호시설 입소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산관리번호만 사용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 및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신체적 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 등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후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결혼이민자 보호, 통역인 지정 규정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였으며(‘13. 5.)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의 증가에 따른 검찰청별 필요통역인을 추가 위촉하였다(‘13. 6.).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0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키르기즈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수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 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강화 및 아동시설 아동학대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14.2.). 2014년 상반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학대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1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p>2011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에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또한 2013년 6월에는 1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초점을 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문 심리치료기관 및 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친족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 (몰도바)	수용	외교부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14.7.10),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11월에 유엔에 가입기탁서를 제출하였다. 비준을 위한 국내이행입법으로서 2013년 4월 5일 형법 등을 개정하여 포괄적 인신매매죄 등을 신설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3	<p>‘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 (필리핀);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브라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네덜란드)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영국);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 (벨기에)</p>	수용	상기 42번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참조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4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 (태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타 피해 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10월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뢰피해자는 의료지원금,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지뢰제거활동을 통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만 8천여 발을 제거하였다.
45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 (헝가리)	수용	성폭력 또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2014년 도입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46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수용	검찰에서 매년 전국 각급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하여 분석서를 발간하고, 이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7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절차 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 (독일)	수용	위 권고 9에 대한 답변 참조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하여 10대 미혼모의 입양동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였고, 중앙입양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8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슬로베니아)	수용	<p>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하였다.</p> <p>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AA 3회 연속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AA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AA 이행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고용기준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한다.</p> <p>2014년부터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 외에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의무도 부여하였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부성휴가제도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 각각 자녀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49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 (네덜란드)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신중한 검토 필요	<p>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12년).</p> <p>개별법에 각각 의무화되어 있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연 4시간 이상)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관별 고위직, 인턴·계약직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였다('14.7월~).</p> <p>또한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은폐 및 추가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여성가족부가 징계 요구하거나 기관평가에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0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수용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권을 명확히 하고,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중립적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였으며, 정보 내용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였다.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정부는 관련 법률상 집회 금지·제한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집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 (스위스)	<p>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p> <p>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2. 2. 23.)</p>	<p>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립법률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로 설립되어 있음은 2013년 우리 정부가 밝힌 바와 같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3	<p>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슬로바키아);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대체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 (미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p>	<p>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p>	<p>2014년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검토를 위하여 입영 및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국민의 58.3%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미국)	수용	<p>공안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현재 국가보안법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신중히 적용하고 있다.</p>
55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모든 체포·구금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체포, 수감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6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밝힌 바와 같다.
57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밝힌 바와 같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8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 (북한)	<p>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p> <p>특히, 법무부는 ▲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p>	정부의 입장은 2013년 1월 밝힌 바와 같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할 것 (중국)	수용	<p>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을 추진하였다.</p> <p>201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시행하고 있다.</p> <p>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공급 시 우선하여 배정하였다.</p>
60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 (쿠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바레인)	수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 혜택을 강화하였다. 한편, 비인가대안 학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61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웨이트)	수용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 예정이다.
62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쿠웨이트)	수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를 전부 개정하여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지역·권역별 공공의료 기반을 내실화하고 있다.
63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수용	2011년 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12년부터 시행하였다.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규모를 2017년까지 GDP대비 1%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은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을 2014년 수립·발표하였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64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속 검토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2013년 11월 개소하였고, 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등록외국인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무지개다리 사업’을 실시하여 선주민과 이주민들간의 문화적 소통, 교류 등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6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2013년 1월 정부의 의견 참조. 20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사업주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허용 변경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66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자의 자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아일랜드)	수용	<p>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등 건강보험이나 건강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2013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전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도 지원한다.</p> <p>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라 2001년 이후 출생자는 12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 아동도 무료접종 대상이다.</p>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67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네팔);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세네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태국)	수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에 한국 적응을 위한 법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의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외국인근로자에게로 확대하여 초기 국내 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해소, 취업활동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68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 (벨라루스)	수용	2014년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3년에는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지침을 마련하였고, 난민인정자와 함께 국내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허가를 하고 있다.

번호	권고내용(국가)	2013년 1월 정부 의견	2014년 현재 이행상황
69	불법(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를 고려할 것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13년 1월 정부의 입장 참조
70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파라과이)	수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인도주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다. 2013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 취약계층 배려여부 등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반영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평가방식을 다양화하여 인권 분야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전 과정에 인권적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8개국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